

“지방의정연수원 혁신도시에 설립하자”

지방의정연수원 전북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처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은 21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당위성을 피력한 뒤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민선 4~6기 지방의회 초선의원 비율은 60%를 웃돈다.



송성환 의원

송성환 행자위원장, 대선공약 채택 도· 정치권 공동대응 주문 “지방의회 역할·기능 확대로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 절실”

실제 전국 지방의원은 3,649명 가운데 2,250명이 초선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한해 편성하는 예산이 5조~20조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24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셈이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수백여 건의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의 확대,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높여 줄

교육시스템이나 사무처 인사권독립 또는 의정보좌관계 등 지원시스템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의원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의 정연수원 연 2회(3일), 지방행정연수원 1회(3일)가 전부다. 이렇다 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체계적인 의정연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 의원과 사무처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인원은 9,141명(의원 3,649명, 직원 5,492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가 정치권과의 공조로 도 차원의 대응 및 내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성환 위원장은 “지방의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설립되면 지방의원 및 사무처직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이 지방의원과 공무원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민주당, 박 대통령 탄핵추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탄핵 추진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 당 최고위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이 퇴진하나 안하냐로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분열을 최소화한다는 고민 속에 최고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총리 추천, 청와대·야당 ‘아차 실수’

김병준 카드 제때 활용했다면 유리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과 관련, 국무총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와 야당 모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측 모두 전략적 판단 미스로 이번 최순실 사태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건어켰다는 이야기다.

야당은 당초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뜻에 걸리면 안된다며 여야가 총리를 추천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무조건적인 2선후보 선언이나 하야만이 정당한 일반적 주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0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한 것을 계기로 이번 정국이 탄핵 추진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자 급해진 김 오하리 야당 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금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이 새 총리 후보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도 박 대통령이 상황 변화를 이유로 지명을 거부할 수 가능성도 있다. 자칫 탄핵안이 통과되면 김병준 내정자도 아닌 박 대통령의 핵심 격인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했던 여야 추천 총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박 대통령의 권위 시에 대비해 안전판으로 새 총리를 뽑아놓고 하야나 탄핵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성이다.

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변화 과정에서 역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철회하지 않은 탓에 야권을 붙여세울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김병준 내정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을 때 박 대통령이 못이기는 척 지명을 철회했다면 황교안 총리만 남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황 총리의 권한대행을 우려해 오히려 탄핵 추진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병준 내정자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김병준 카드가 절충점이 될 수도 있다.

김 내정자를 진작 포기했다면 정치권이 새 총리를 추천하면서 탄핵을 추진해도 박 대통령이 황 총리 카드를 고수할 수도 있고, 최소한 총리 문제를 놓고 야권과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이 가능했을 것이라 설명이다.

꼬일대로 꼬여가는 이번 정국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야당 모두가 허공 속에 허발질을 거듭하고 있다. /뉴시스

“美,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 없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의교단은 21일 미국을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의당 정동영(단장) 조배숙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정병국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5명의 의원의교단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일간(14~18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 관계자들을 접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예상밖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청와대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서둘렀다”며 “지난 월요일 출국해 트럼프 당선자 캠프 인수위 주위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 30여 명을 연쇄 접촉,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워싱턴은 북핵문제를 본인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부터 대화까지 폭넓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단순한 제재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외교 수단, 대화 등을 모두 다 폭넓게 활용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처럼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미국)가 무력사용을 먼저 할 확률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활용해보자’고 했다”며 “저희들이 그렇다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왜 중국과 미국이 직접 대화해보지 않느냐’고 되물었지만 명쾌한 답은 못 얻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1일 전주대본관(4, 5층)에 위치한 국제한식조리학교를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산경제위원회의 현지의정활동은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시설견학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무성 새누리 전 대표, 전북대 강연 취소

총학생회 반발로... 새누리당·전북대, 일정 재조정키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전북대학교 강연이 총학생회 반발로 취소됐다.

김 전 대표는 21일 오후 전북대학교 가인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전북대 총학생회

측은 지난 18일 학교 측에 강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 시국에 새누리당이 당적을 둔 정치인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학교 측에 밝혔다.

이 같은 총학생회 측의 강한 반발로 김 전 대표의 전북대학교 연설이 이날 취소

됐다.

새누리당과 전북대 측은 강연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고민형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 · 문화 · 관광 ·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景

내장산 단풍터널

2景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景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景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景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景

피향정 연꽃

7景

정읍천 벚꽃길

8景

전설의 생화차거리

9景

백정기사의 기념관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읍단풍미인한우
대표이사 김준영

정읍산림조합
조합장 김민영